"잘못된 세종시 정책 하나가 나라 망쳐"

박주선·이용섭·강운태·주승용 등 지역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서 '세종시 수정' 저지 공격수 나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난타전 예고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안 저지 공격수로 전면에 나선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4~10일까지 5일 동안(휴일 제외)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는 지역 의원은 박주선·김성곤·박지원·주승용·강운태·이용섭·김영록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세종시 수정안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한나라당 의원과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 맞서 세종시 수정안 강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계획이다.

첫날인 4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박주선 의원은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잘못된 정책 하나가 국론 분열은 물론 나라전체를 망치고 있다"며 "정부는 '세종시 특혜'라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원형지'를 분양하겠다고 하지만 혁신도시 중 원형지 분양이 가능한 곳은 지난해 12월 현재 전북혁신도시의 농생명클러스터 외엔 한 곳도 없는데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 이용섭 의원은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까지 내놔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지방경제를 말살하는 블랙홀이고 블랙홀인 이유는 결국 특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는 예정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기업이 세종시로 가지 혁신도시로 오겠냐"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강행을 공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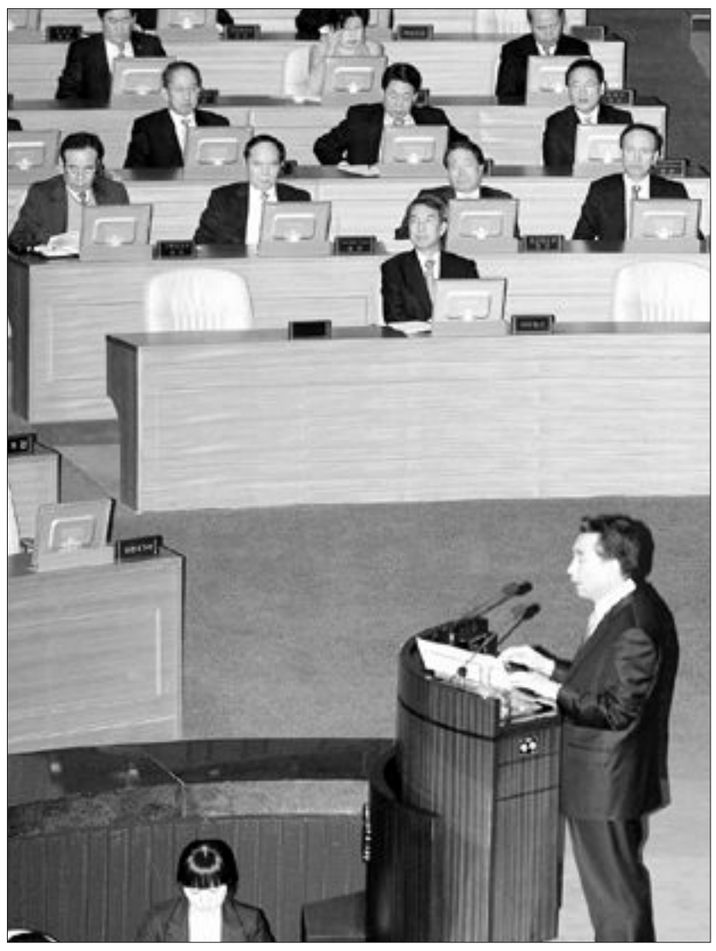
경제분야 둘째 날인 9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강운태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국가 균형발전 위기 대책은 무엇인지, 또 국가 경제 전반 및 지역경제 미치는 폐해를 따질 계획이다. 나아가 기본적으로 애초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고 행정 효율성이 문제된다면 국회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듯 호남에도 기업유치나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따질 예정이다.

주승용 의원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부처가 빠진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세종시는 기업의 블랙홀로서 오히려 타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할 작정이다. 그는 또 "세종시는 수정하면서 혁신도시는 원안대로 가겠다는 것은 충청권과 비충청권을 분리시킨 다음 비효율을 이유로 혁신도시마저 무산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며 "세종시 수정으로 피해를 보는 혁신도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역시 같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록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세종시와 4대강은 국가 경제 위기를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뒤 "세종시의 대기업 특혜로 인해 나주 혁신도시와 J프로젝트에 민자유치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5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김성곤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제외국민선거권 부여와 관련, 무분별한 한나라당 해외조직 조기 구축에 대해 경고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적극적 대북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이강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수정안' 다음달 국회제출

당정 합의… 2월 일자리·민생법안 우선 처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세종시 수정법안을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3월에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그 문제(세종시 문제)를 따로 다루도록 해달라"며 정부 측에 세종시 수정법안의 3월 제출을 공식 요구, 정 총리 등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께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 기간 세종시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진화하고 충청권 여론을 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당정의 결정은 종전의 오는 26일께 세종시법을 제출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이 경우 2월 임시국회가 세종시 전쟁터가 될 것이란 한나라당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3월에 수정법안이 제출되면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 둘러싼 격돌이 예상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야당과 친박계 등의 반대가 더욱 거셀 게 명약관화해, 여·여, 여·야간 갈등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금주나 내주 초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2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서민과 지역, 미래를 위한 중점법안을 처리할 것이며 국회 선진화, 사법제도 개선, 행정구역 개편 등 3대 개혁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세종시법 3월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중소 유통업체들이 타격을 받는다며 이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또 희망근로사업과 관련, 사업계획과 농어촌 인력수요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일자리 창출·유지, 서민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 위헌·헌법불합치 관련법 등과 관련해 114건의 법안을 선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0만원 받고 5천만원 물어

선거법 위반 269명에 과태료 4억7천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선거법 위반자 269명에게 과태료 4억7천499만원을 일괄 부과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 금품수수자에게 일률적으로 해당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선거법조항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 1월 관련조항을 고친 선거법이 공포됨에 따라 선관위는 새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농협조합장선거 금품수수자에 대해선 '50배 과태료'를 엄격히 적용하고, 자수자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람에게는 선거법을 준용해 감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내용을 보면 A농협조합장 선거 당선자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13명에게 모두 3억2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현금 100만원을 받은 B씨는 '50배률'이 적용돼 최고액인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각종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수수 과태료 부과제도를 적용한 이래 한 사람에게 5천만원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종 조합법상 과태료 상한액은 5천만원이고, 개정 선거법상 상한액은 3천만원이다. /연합뉴스

■ 지방선거 핫 코너

박준영 "세종시 수정안 잘못된 것"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일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다"며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정무부지사가 하거나 성명을 내기는 했지만, 박 지사가 여기에 직접 나서지는 않아 선거를 앞두고 타 후보들로부터 "현 정부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박 지사는 이날 영광군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 5+2 광역경제권 사업중 광주·전남지역에 배정된 신 재생에너지·친환경자동차·LED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시·도가 기업을 유치하는 반면 세종시는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양형일후보 무상급식 정책 연대 제안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출마를 선언한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에게 광주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양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복지 확대는 광주시 복지정책의 핵심 골자인 만큼, 교육감 후보들과의 정책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의 경우 연간 9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기 교육자치 수장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원씨 "시교육감 출마 않겠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3일 "세종시 원안추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 광주·전남경제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겠다"며 광주시교육감 후보 출마 의사를 접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역발전의 해답을 지역인재양성에서 찾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자치, 교육개혁을 이뤄 명실상부한 인재 광주를 만들어가고 싶었다"고 밝혔다.

朝大 광주시장 예비후보 초청 간담회

조선대총학생회와 민주동우회는 4일 오전 광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를 초청, 옛 경영진 재단참여의 문제점에 관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조선대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로 옛 재단의 경영참여를 반대했으나 교과부와 사분위가 강행, 지역민의 불만과 우려가 높다"며 "예비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장 후보로 거론된 박광태 현 시장을 비롯 강운태, 이용섭 의원, 양형일 전 의원, 정동채 전 장관 등 9명을 초청했다.

/채희종·최권일·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